

# 기본소득정치연대

## 2019 회원총회 자료집

일시 : 2019년 9월 1일(일) 14시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4층 대강당)

## [안건 순서]

보고1] 2019년 조직보고 ----- 3p

보고2] 2019년 재정보고 ----- 5p

논의1] 조직진로에 관한 건----- 6p

보고1

1. 2019년 조직 보고

- 주문사항 : 2019년 조직 보고를 확인해주십시오.

1. 조직 증감 현황

단위 : 명

지역	2018.12.31 회원수	2019.08.07 회원수	증감
총원	148	150	+2
서울	59	58	-1
경기	22	24	+2
인천	15	14	-1
충북	2	3	+1
충남	12	11	-1
대전	6	6	0
세종	0	0	0
전북	5	5	0
전남	7	8	+1
광주	5	5	0
제주	3	3	0
경북	1	1	0
경남	1	0	-1
부산	2	3	+1
울산	3	4	+1
대구	3	4	+1
강원	1	0	-1
해외	1	1	0

- 가입 회원 12명, 탈퇴 회원 10명. 총 2명 증가.
- 2019년 8월 7일 기준 조직현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총회 당일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보고2

2. 2019년 재정 보고

- 주문사항 : 2019년 재정 보고를 확인해주십시오.

1. 2019년 총 결산표

□ 총 수입

단위 : 원

관	항	목	금액
수입	이월금	이월금	₩4,137,631
	회비	정기회비	₩5,232,820
		특별회비(후원금)	₩0
	회비 외	이자수입	₩667
		사업참가비	₩0
		기타	₩0
	총액		

□ 총 지출

단위 : 원

관	항	목	금액
기본경비	사무실 설치 운영비	관리유지비	₩750,000
		비품 및 소모품비	₩0
		임차료	₩750,000
		통신요금	₩600
	인건비	급여	₩3,800,000
정치활동비	조직활동비	교육훈련비	₩0
		연대사업비	₩30,000
		조직사업비	₩834,000

		출장비	₩0
		홍보비	₩30,613
총액			₩5,445,213

단위 : 원

## 2. 2019년 임출금 기록표

일시	내역	수입	지출	잔액
2019.01.01	이월금	₩ 4,137,631		₩ 4,137,631
2019.01.01	페이스북 광고비		₩ 30,613	₩ 4,107,018
2019.01.02	사무처장 활동비		₩ 500,000	₩ 3,607,018
2019.01.21	카드 문자 안내비		₩ 300	₩ 3,606,718
2019.01.30	사무실 운영비		₩ 100,000	₩ 3,506,718
2019.01.31	1월 회비 입금	₩ 738,430		₩ 4,245,148
2019.02.01	사무처장 활동비		₩ 500,000	₩ 3,745,148
2019.02.01	1월 회비 추가	₩ 35,070		₩ 3,780,218
2019.02.20	사무실 운영비		₩ 100,000	₩ 3,680,218
2019.02.21	카드 문자 안내비		₩ 300	₩ 3,679,918
2019.02.28	2월 회비 입금	₩ 499,320		₩ 4,179,238
2019.03.05	사무처장 활동비		₩ 400,000	₩ 3,779,238
2019.03.29	3월 회비 입금	₩ 750,000		₩ 4,529,238
2019.03.29	사무실 운영비		₩ 100,000	₩ 4,429,238
2019.04.01	사무실 운영비		₩ 100,000	₩ 4,329,238
2019.04.01	사무처장 활동비		₩ 400,000	₩ 3,929,238
2019.04.18	문자 충전		₩ 50,000	₩ 3,879,238

2019.04.30	깃발 제작		₩ 30,000	₩ 3,849,238
2019.04.30	4월 회비 입금	₩ 840,000		₩4,689,238
2019.05.03	사무처장 활동비		₩ 400,000	₩ 4,289,238
2019.05.03	사무처원 활동비		₩ 100,000	₩ 4,189,238
2019.05.11	이자수입	₩ 667		₩ 4,189,905
2019.05.21	사무실 운영비		₩ 100,000	₩ 4,089,905
2019.05.31	5월 회비 입금	₩ 780,000		₩ 4,869,905
2019.06.02	사무처원 활동비		₩ 100,000	₩ 4,769,905
2019.06.02	사무처장 활동비		₩ 400,000	₩ 4,369,905
2019.06.19	사무실 운영비		₩ 100,000	₩ 4,269,905
2019.06.24	문자 충전		₩ 50,000	₩ 4,219,905
2019.06.28	텀블러 주문		₩ 647,000	₩ 3,572,905
2019.06.28	6월 회비 입금	₩ 760,000		₩ 4,332,905
2019.07.01	사무처원 활동비		₩ 100,000	₩ 4,232,905
2019.07.01	사무처장 활동비		₩ 400,000	₩ 3,832,905
2019.07.16	사무실 운영비		₩ 150,000	₩ 3,682,905
2019.07.26	택배 발송비		₩ 87,000	₩ 3,595,905
2019.07.31	7월 회비 입금	₩ 820,000		₩ 4,415,905
2019.08.03	사무처원 활동비		₩ 100,000	₩ 4,315,905
2019.08.03	사무처장 활동비		₩ 400,000	₩ 3,915,905
2019.08.05	회비 직접납부	₩ 10,000		₩ 3,925,905
수입/지출 합계 및 잔액		₩ 9,371,118	₩ 5,445,213	₩ 3,925,905

❑ 총회 당일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p>논의1</p>	<p>1. 기본소득정치연대 조직진로에 관한 건</p> <p>- 주문사항 :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회원총회 제7조(권한) 3항 “조직해산 등 조직진로 의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진로를 결정해주십시오. 이와 함께 회칙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회원총회 제7조(권한) 2항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의거하여 조직진로 결정과 연동하여, 회칙을 개정해주십시오.</p>
------------	---

## ● 조직진로 변경안

<기본소득정치연대는 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2020년 총선 이전 창당 완수를 목표로 기본소득당 창당에 동의하는 제세력과 함께 기본소득당 창당운동에 돌입한다.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회원총회를 통해 기본소득당과의 조직적 통합을 추진한다.>

## ● 조직진로 변경에 따른 회칙개정안

- 조직진로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철회되기에 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전제로 했던 회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 - 회칙 개정안

현행	개정
<p>제1장 총칙</p> <p>제2조(목적과 위상)</p> <p><u>②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단체이며, 정당운동과 사회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본회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당의</u></p>	<p>제2조 2항 삭제</p>

<p><u>의제기반 광역당부로서 노동당의 활동에 참여한다.</u></p>	
<p>제2장 회원 제4조(가입 및 탈퇴) <u>②노동당 당원인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하고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9조(당비)로 정한 당비를 본회에 추가납부하여야 한다.</u> <u>③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의사를 담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본회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④노동당원인 회원이 본회를 탈퇴한 경우, 그 효력은 본회의 회원 자격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노동당 당원자격과는 무관하다. 회원 중 노동당원의 노동당 입당과 탈당,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이 아니라 노동당의 당원과 당규에 따른다.</u></p> <p>제5조(징계) <u>②노동당원인 회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회원 자격에 한정된다.</u></p>	<p>제4조 2항 삭제</p> <p>제4조 3항 → '2항'으로 수정</p> <p>제4조 4항 삭제</p> <p>제 5조 2항 삭제</p>
<p>제3장 회원총회 제2절 대의원대회 제10조(구성) <u>③본회에 할당된 노동당 대의기구 구성원은 본회 대의원 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u> <u>④대의원 정수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숫자만큼 선출직 대의원을 둔다. 선출직 대의원은 <u>당적과 무관하게</u> 모든 회원이 입후보할 수 있다.</u> <u>⑤대의원대회 의장은 본회의 대표가</u></p>	<p>제10조 3항 삭제</p> <p>제10조 4항 → '3항'으로 수정 <u>'당적과 무관하게'</u> 삭제</p>

<p>말는다.</p> <p>제13조(소집)</p> <p>③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u>노동당 당규 제11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0조 5항 → '4항'으로 수정</p> <p>제13조 3항</p> <p>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u>일반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u>'로 수정</p>
<p><u>제7장 노동당 대의기구 파견</u></p> <p><u>제28조(파견)</u></p> <p>① <u>노동당의 의제기반 광역당부로서 본회에 할당된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모든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u></p> <p>② <u>본회에 할당된 전국위원과 대의원에 관한 사항은 당헌과 당규를 따른다</u></p> <p>③ <u>노동당 대의기구 직책에 대하여 노동당원이 아닌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u></p>	<p>제7장 노동당 대의기구 파견 전체 삭제</p>
<p>제8장 기타</p> <p><u>제29조(회칙의 해석 등)</u></p> <p>① 이 회칙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② <u>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 중에서 정당의 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당의 당헌, 당규 및 정당법으 준용한다.</u></p>	<p>제8장 기타 → '제7장 기타'로 수정</p> <p>제29조(회칙의 해석 등) → '<u>제28조(회칙의 해석 등)</u>'으로 수정</p> <p>제29조 2항 전체 삭제</p>

## \* 조직진로 변경 취지

지난 2019년 상반기, 노동당에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정치노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개정이 이 정치노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 중심의 정치노선을 포함한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개정은 7월 7일 정기당대회에서 재적인원 150명에 찬성 93명으로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개정은 단순히 당의 '이름'만을 바꾸는 논의와 결정이 아니었다.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동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노선에 대한 논쟁이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안 논쟁을 촉발하고 주도함으로써 대안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로서 제안된 논쟁이었다.

그러나 당대회 논의과정에서 '기본소득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을 포기하는 것', '이미 이재명이 있지 않냐. 공이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 답이 없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의 하나일 뿐',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등의 발언들이 당의 주요 간부로부터 나왔다. 이는 단지 소수의 주요 간부들의 발언만이 아니었다. 다수의 당원들로이 기본소득의 해방적 의의를 조롱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 수준을 넘어서 노동당 내에 존재하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반대와 물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대회의 결정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당대회까지의 논쟁의 모습은 우리에게 조직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운동의 형성은 우리 단체의 설립의 목적이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정세 개입의 필요성은 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가 매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문제 역시 이미 4~5년 전부터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알파고 쇼크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 등 빈곤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복지국가가 영향력과 의미를 잃어갈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보수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진보정당들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책과 브랜드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선별적인 현금수당정책들에 ‘한국형 기본소득’같은 이름을 붙이며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이 등장하는 데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변종 기본소득들이 기본소득의 자리를 가져가며, 전혀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위기를 지속시키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지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이 등장하고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단체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 단체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이다. 그러나 노동당을 운영하는 주요 간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물이해를 드러냈고, 현재 정세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지속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사회운동을 형성하고 강화’한다는 우리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단체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운동, 정당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기본소득을 단지 기존의 위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해방적 의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체제의 핵심 구성원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정당, 현재 국면에서의 핵심적인 정치운동의 과제로 기본소득의 실현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당>의 건설이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총선까지의 시기는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대중적이므로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 기본소득당의 창당은 그 자체로 기본소득의 실현을 현재의 위기를 해소할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인식하는 정치적 대중의 형성의 과정이 될 것이다.

총선 직전까지 기본소득당의 창당을 완수한다면, 이는 총선에서의 아젠다로서 기본소득이 등장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자, 기본소득 정치의 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당의 창당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각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의 규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본소득 정치의 확산과 조직의 확장을 위하여 지금 이 시점에 기본소득당 창당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 기본소득당을 시작하자.

#### \* 경과

- 2017년 12월 2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사회운동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정치연대 출범. 이후 노동당 사회운동기구로 등록함.
- 2019년 우리 단체가 사회운동기구로 등록한 '노동당'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펼쳐나가려는 움직임이 등장함. 2019년 7월 7일 정기당대회에서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개정을 포함한 당헌개정안이 부결됨.
- 2019년 8월 기본소득당 창당의 움직임이 등장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기본소득 창당운동에 결합하고 있는 상황임.
- 7월~8월 용혜인 대표가 전국의 회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사회운동기구로서 노동당과 기본소득정치연대의 관계, 창당운동의 결합 등에 대한 조직적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확인함.
- 2019년 8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회원총회'를 추가하는 회칙개정을 진행하고, 9월 1일 회원총회를 소집함. 기존 회칙상 대의원대회에 조직진로에 관한 권한이 있었으나, 대의원을 넘어서 전체 회원들의 합의로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대의원대회의 판단에 의거한 것임.
- 8월 26일 인천, 8월 27일 전주, 8월 30일 서울/경기의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외 지역의 회원들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우리 단체의 목표인 기본소득 정치운동을 형성/강화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배타적 지지를 표했던 노동당을 통해 더이상 기본소득 정치운동을 펼쳐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들을 확인함.